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로 본 新냉전 구도 : 반대 · 기권 국가에 주목해야

정유진

박사과정, 러시아·CIS 경제 전공
yujinj422@gmail.com

유엔의 지속적인 러시아 규탄 결의안

유엔(UN)은 지난 3월 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41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고, 당사국인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는 반대했다.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35개국은 기권했다.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이 지속되자 유엔은 지난 3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 결의안은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8표로 채택되었는데, 반대국가는 3월 2일 결의안과 동일하며, 중국은 다시 한번 기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러시아 물결이 일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및 금융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또한 줄줄이 철수를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유엔뿐만 아니라 WTO에서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는 디폴트 위기라고까지 평가받았으나 가스 구매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에 영향을 받는 세계 원자재시장, 외환시장 등은 하루하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쟁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4월 4일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고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원국 193개국 중 175개국이 투표에 참여, 찬성표 93개국, 기권표 58개국, 반대표 24개국을 기록했다.

기권표는 제외되므로 유효표 중 이사국 자격 정지 가결인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모은 것이나, 사실상 기권표와 반대표를 모두 합하면 전체 투표국가의 46%에 달한다.



자료: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표결 결과. UN Photo/Manuel Elías
(<https://news.un.org/en/story/2022/04/1115782>)

투표 결과에 新냉전 구도 숨어 있어

우리는 유엔의 결의안에 기권한 국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인륜적인 전쟁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혹은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新냉전 구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 | UN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안 (2022.2.25.) | UN 총회 1차 결의안 (2022.3.2.) | UN 총회 2차 결의안 (2022.3.24.) | UN 인권이사회 자격 관련 (2022.4.7.) |
|-----|---------------------------------------|---------------------------------------|---------------------------------|-------------------------------------|
| 총국가 | 15개국 | 193개국 | 193개국 | 193개국 |
| 투표국 | 15개국 | 181개국 | 183개국 | 175개국 |
| 찬성 | 11개국 | 141개국 | 140개국 | 93개국 |
| 반대 | 1개국 (러시아) | 5개국 (러시아,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벨라루스) | | 24개국 (중국, 이란 등) |
| 기권 | 3개국 (중국, 인도, UAE) | 35개국 (중국, 인도, 이란 등) | 38개국 (중국, 인도, 이란 등) | 58개국 (인도, UAE 등) |

자료: UN News(news.un.org/en).

제시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과 인도는 대러시아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해왔다. 인도는 전쟁 이전보다 러시아의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국경 영토분쟁이 장기적인 이슈로,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아 대러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의 무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개도국 피해를 이유로 러시아 제재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등 현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를 약화하거나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일종의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 우려와 경고를 표하고 있다.

위 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러시아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에 반대 혹은 기권하는 국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표결 전 러시아가 유엔 회원국에 반대를 종용하는 등 압박을 보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자국의 이익과 결부되어있는 국가들이 반대 혹은 기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5개 유엔 회원국 중 82개 국가(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 관련 투표에 기권 혹은 반대한 국가)는 무려 42%의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 권역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新냉전 구도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발행인 ■ 홍완석 편집인 ■ 김상경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